

# 민형배 “통합특별시, 청년 머무는 도시 만들겠다”

### 영광군 서로마을 방문... 청년들과 현장 간담회 시민 주도·행정 기반... 시민주권정부 구현 강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10일 영광군 대마면에 위치한 전남형 청년마을 ‘서로마을’을 찾아 청년 정책과 지역재생 현장을 점검하고 운영진 및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 당선인은 이날 지역아동센터와 카페, 수제버거 가게 등을 운영하는 청년들과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마을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청년들은 주거 공간 확충과 정착 지원 확대,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요청했

고, 민 당선인은 관련 내용을 메모하며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 당선인은 간담회에서 공동체 중심 지역재생의 세계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스페인 마리날레다 마을을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원이 끊기면 끝나는 사업은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마을을 부어 물이 팔팔 쏟아지게 해야 한다.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10일 영광군 대마면에 위치한 전남형 청년마을 ‘서로마을’을 찾아 청년 정책과 지역재생 현장을 점검하고 운영진 및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상품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민 당선인은 수제버거 매장을 찾아 직접 홍보 영상을 촬영하며 “주말에는 손님이 많으니 비 오는 평일에 오시면 더 좋다”고 소개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서로마을은 전남도가 조성한 20개 전남형 청년마을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카페와 수제버거 가게, 목공방, 청년 공유공간 등을 조성했으며 관광 체험상품 개발과 청년 창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기반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정착을 지원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보호체계를 떠난 청년들이 주거와 일자리, 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실제 인구 유입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로마을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청년 10명과 장년 4명, 아동 1명 등 총 15명의 신규 인

구가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민 당선인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행정이 계획하고 시민이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다. 시민이 먼저 길을 만들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시민주권정부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마을처럼 지역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불러들이는 힘을 키워야 한다”며 “통합특별시가 청년이 머무르고 시민이 결정하는 도시,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시민들이 ‘통합하길 잘했다’고 평가하는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성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 조성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 촬영을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철식 원내대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내정된 김승수 의원.

## ‘투표지 부족사태’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

### 여야 협상 착수... 민주, 18일 계획서 의결 목표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된 국조 요구서를 의국에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한병도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유상범 의원 등 110인으

로부터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이다.

국조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가 조사계획서를 협상을 통해 성안한 뒤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조정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서 국조 특별위원회 구성 등 세부 계획을 놓고 협상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 필요성

에 공감하지만, 국조 특위의 위원장과 위원 구성,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위원 배분을 놓고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조와 특검을 동시 추진할지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조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에 따라 특검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여야가 일정한 ‘후고반기’를 통해 타협안을 비교적 빠르게 도출할 수

있던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의결을 잡아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 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국가적 중대사안을 전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조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철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폄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李 대통령, EU에 ‘철강관세 우호’ 요청

### “EU 측, 최대한 고려하겠다 답변”...靑 “좋은결과 기대”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EU 측의 철강 관세 대폭 인상 조치 및 수출국들의 무관세 물량 확보 노력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배려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로마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회담 도중 철강 무관세 쿼터(TRQ) 확보 문제와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EU는 역대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의 연간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의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새 관세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한국 등 주요 철강 수출국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쿼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김 실장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은 우리 철강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연쇄적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에 정부는 EU와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공동언론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력 대응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정책위원회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EU와 정상회담을 통해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했고,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당부했다”며 “EU 측은 한국이 공동가치 공유 국가이자 전략적인 중요 파트너인 만큼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민선 9기 준비 본격화

### 강성희 당선인 ‘목포대전환 준비위’ 출범

#### 위원장에 고석규 전 목포대총장... 15명 인수위원 선임

강성희 목포시장 당선인(사진)의 민선9기 시정준비기구인 ‘목포대전환 준비위원회’가 인수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목포대전환 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민선9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 과제 점검, 시정 비전 수립 등 본격적인 인수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15명의 인수위원과 14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목포 종합경기장 내 사무실에서 운영된다.

특히 준비위원회는 선거캠프 인사를 최소화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고석규 전 목포대학교 총장이 선임됐으며, 부위원장 김경호 전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담당장, 간사에 김영준



전 강성희 목포시장 선거사무소 정책실장 등 도시계획·지역개발·경영·회계·복지·청년창업·문화예술·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했다.

전 강성희 목포시장 선거사무소 정책실장 등 도시계획·지역개발·경영·회계·복지·청년창업·문화예술·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했다.

강성희 당선인은 “준비위는 앞으로 4년, 나아가 30년 목포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본부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 논리보다 전문성과 실용성을 우선해 준비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목포시의 핵심 현안과 공약 이행 방향을 집중 점검하고, 업무보고 역시 단순 현황 나열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보고 체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 임지락 화순군수 당선인, 인수위 가동

#### 위원장에 김종갑 내장... “정책·현장 중심 인선”

임지락 화순군수 당선인(사진)이 꾸린 민선 9기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임지락 당선인 측은 인수위 위원장에 김종갑 전 화순부군수를, 부위원장에는 최옥경 전 화순군 복지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인수위는 산업경제, 지역개발, 농업농촌, 교육복지, 문화관광체육, 자치행정 등 6개 분과에 인수위원 12명, 자문위원 1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인수위는 임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정파와 상관 없이 정책과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로 꾸려졌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여성도 안배했다.

인수위는 12일 오전 10시 군민회관에서 위촉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나선다.



임지락 화순군수 당선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전략에 따라 급격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현장형 전문가로 인수위를 구성했다”면서 “인수위 활동을 통해 화순의 미래 100년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전략과 현실적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서별 업무 보고, 현장 점검, 정책 공약 이행 보고 등을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인수위를 운영한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 이재각 진도군수 당선인, 인수위원 위촉

#### 김희동 위원장 등 15명...군정 현안·공약 이행계획 집중

‘민선 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소전미술관 2층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선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는 김희동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본격적인 시정 인수를 위해 조직과 예산, 주요 정책 현황을 세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또 분야별 정책을 검토하고 현안을 분석해 군정 목표와 방침을 구체화하고, 민선9기 출범 이후 군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직과 예산, 주요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군민의 기대와 지역발전 수요를 반영한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인수위원회는 11일 분과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와 주요 현안 청취를 진행하고, 공약 이행계획과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민선9기 군정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3339@gwangnam.co.kr